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외국 인력 산재 가능성 증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3년 9월에 실시한 건설 현장의 노사에 대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전년(2012년) 대비 외국 인력 규모는 ‘줄었다’는 응답보다는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동 연구에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수를 25만 1,712명으로 추정하였다. 그 가운데 합법은 약 6만명, 불법은 약 19만명으로 추정됐고, 동포(조선족) 대 중국인(한족) 대 기타 외국인의 비율은 약 50% 대 30% 대 20%의 비중으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이 타 업종에 비해 산재 발생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한국어에 취약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자가 많아지고,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

인, 특히 불법 체류자가 많아지면 산재 발생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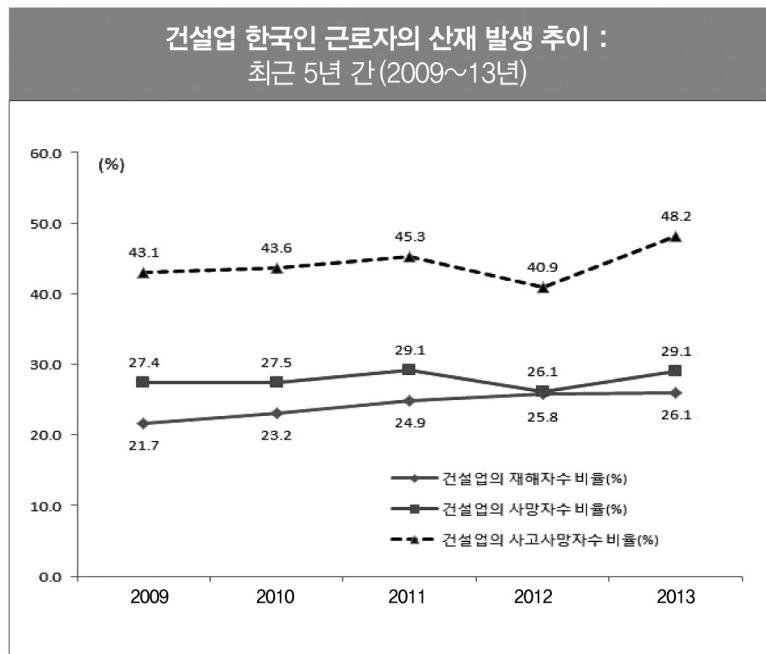
증대 재해 위험성 높아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2009년에서 2013년까지 7.3%, 7.4%, 7.2%, 7.2%, 7.0%이고(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2년과 2013년 각각 10.7%와 8.4%다(통계청, 외국인 고용 조사). 따라서 건설업의 재해자 수 또는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러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날 경우 건설업의 산재 발생은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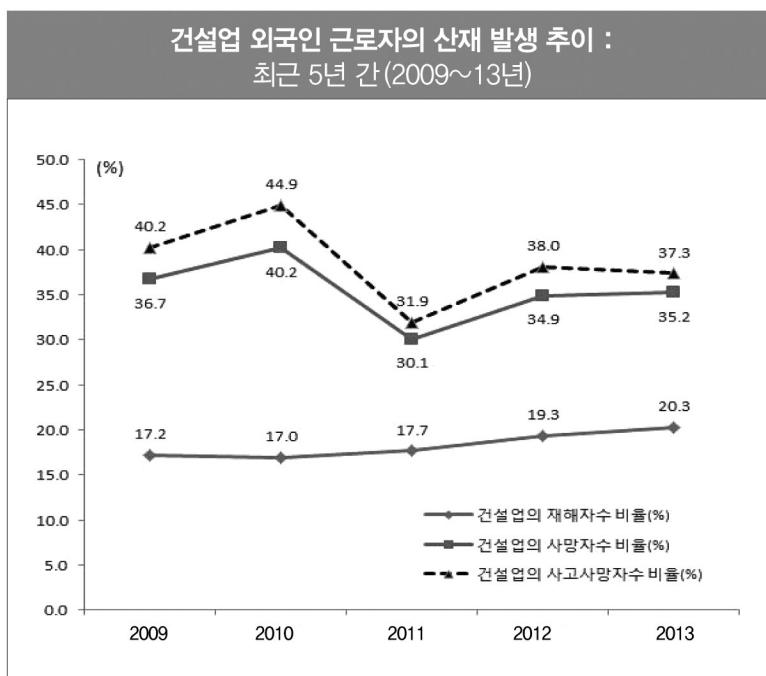
먼저, 건설업 한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재해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21.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26.1%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 기간 27.4%에서 29.1%로 높아졌으며, 질병 사망자를 제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3.1%에서 48.2%로 높아졌다. 이것은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7%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재해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7.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20.3%에 이르렀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 기간 36.7%에서 35.2%로 다소 낮아졌으며, 질병 사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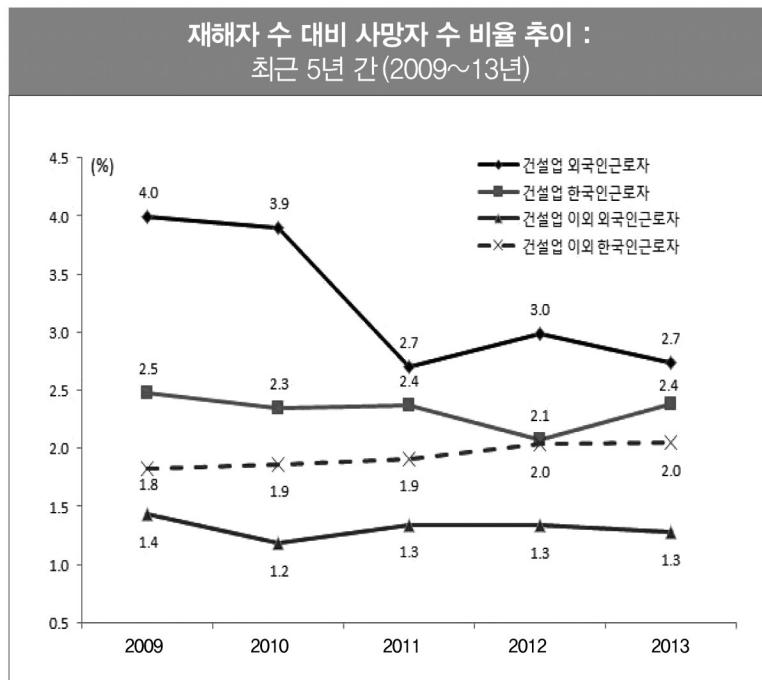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망자를 제외한 사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에서 37.3%로 낮아졌다.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그 비중과 비교할 수 없으나 이것 역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7% 정도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하다.

한편, 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대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이외의 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09년 1.8%에서 2013년 2.0%로 큰 변화가 없고 건설업의 동 비율 역시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2.5%에서 2.4%로 유지되어 왔다.

그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이외의 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은 2009년 1.4%에서 2013년 1.3%로 한국인 근로자의 비율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에 비해 건설업의 동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은 4.0%에서 2.7%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건설업 이외의 동 비율에 비해 2배 높은 수준이다.

주지하듯이 건설업의 중대 재해 발생 가능성이 건설업 이외에 비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료 : 고용노동부 내부 자료.

외국 인력 산재 증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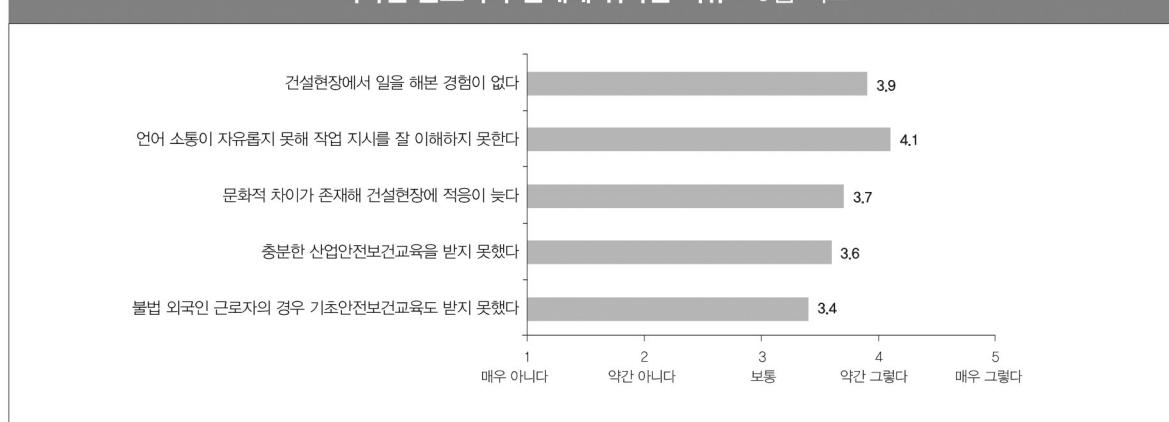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가장 긍정도가 높은 항목은 ‘언어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 작업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4.1)이고, 그 다음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3.9)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해 건설 현장에 적응이 늦다’ (3.7)라는 항목이다. 긍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나 ‘충분한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받지 못했다’ (3.6)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 교육도 받지 못했다’ (3.4)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건설 현장 관리자들이 강조하는 가장 주된 산재 발생 원인은 ‘공사비 부족’에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는 ‘공기’가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산재가 더 많고 피재자(被災者) 중 불법 취업자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노무비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의 불법 외국 인력을 선호하게 되며 무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에 취약한 이유 : 5점 척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관련 설문조사(건설업체 대상), 2014. 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고, 특히 불법 체류자는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산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리하게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면 산재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는 보다 많은 외국 인력들이 있으니 희생자 중에도 외국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외국 인력 산재 예방 대책

산재 발생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산재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건설 현장 유경험자의 재입국을 촉진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적응도 및 숙련도 제고를 통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현장 경력을 쌓은 근로자의 재입국시 적용 요건을 완화(현행 40세 미만 연령 제한 및 동일 사업체 규정 등)해야 한다.

둘째, 도입시 건설 현장 유경험자를 선발한다. 건설 현장 적응도를 높

여서 산재를 예방하려는 방안이다. 선발 과정에서 한국어 시험 점수가 중요해짐에 따라 건설 현장 경험자가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 현장 유경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이들에 대한 선발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외국어 안전 동영상 교재의 확충이다. 현재 다양한 외국어 교재가 보급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모국어 동영상, 안내책자, 안내문 게시 등 다양한 교·보재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기관의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전문기관의 안전 교육은 도입시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무료 안전보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예컨대, 2년마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건설 현장에 대한 산업안

전보건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담당 기관 및 강사의 건설 분야 전문성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 교육 담당 기관의 건설 분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동포근로자(H-2)에 대한 건설업 취업 교육(1일치)을 건설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여섯째,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서 적정 공사비의 확보 및 전달 장치가 필요하다.

상술한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건설 현장 산재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공사비 부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공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정공사비 확보와 말단까지의 전달이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대책이다. CERIK